

“군산교육문화회관 수영장 건립 절실”

최인정 의원 “25m거리의 8레인이 최적... 학생·장애인·노인·수영선수들 사용할 수영장 될 것”

전라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이 군산교육문화회관 실내수영장 건립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도내 시 단위에 수영장이 없는 곳은 군산뿐으로 건립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최인정 의원

그동안 군산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최근 생존수영 교육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군산지역 엘리트체육 수영선수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전용 수영장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물론, 군산월명체육관과 대야면 수영장이 있지만 이들 수영장은 장애인과 노인들도 접근하기 어렵고, 이미 수용인원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최인정 의원은 지난 7월 도교육청 산하 교육문화회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학생 안전을 위한 생존수영 교육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고, 특히 군산지역 엘리트체육 수영선수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수영장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율리, 그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수영장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즉, 교육문화회관의 목적인 평생학습공간의 활용도를 최대로 높이는 것이 최선이다.

최인정 의원은 “군산교육문화회관은 평생학습공간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노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건립되어야 한다”면서 “이는 차별받는 수영



지지 호소하는 정동영

국민의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동영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광주 서구 서구갑지역사무소에서 당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장 이용이 아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 제시했던 50m 국제규격 수영장은 현 군산교육문화회관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만약 수영장이 건립된다면 25m거리의 8레인이 최적”이라면서 “8레인에서 장애인전용 레인과 노인전용 레인을 배분하고 나머지 6레인은 학생들과 일반인들

이 사용한다면 누구나 이용가능한 수영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정 의원은 “그동안 군산시민들이 수영장 시설이 부족해 이용하지 못하고, 엘리트체육 수영선수들의 운동공간이 부족해 수많은 민원이 발생했다”면서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생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노인들의 사회적배려자를 위한 수영장을 군

산교육문화회관에 반드시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에 군산교육문화회관 수영장 건립 예산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군산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이용가능한 수영장을 위해서라도 도교육청은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추미애 “문재인 케어 방향 옳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문재인 케어의 방향은 전적으로 옳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 복지 재정은 늘었지만 빈곤율이 늘고 빈곤생계마저 위협받던 허술한 복지체계의 개혁을 의미한다”며 “사회안전망이 탄탄하게 설계돼야 국민의 삶이 든든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제1차 기초생활 보장 계획에 대해서도 “이번 대책은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삶의 질을 보장하고 빈곤의 사각지대를 없애 국민 최저 생활선을 지킨다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높게 평가했다.

추 대표는 북한발 안보 위기에 대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대결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진다”며 “북한 리스크가 장기화되면 안보와 경제 모든 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강대국들은 대화 국면 전환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은 무책임하고 무모한 군사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며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언급하는 행위 자체가 북한이 주장하는 자위적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자멸을 부르는 헛된 망상이라는 것을 지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국을 향해서도 “미국 고위 당국자도 과도한 언행을 자제하라”며 “충족적이고 치밀하지 못한 메시지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북한의 간교한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정부는 이번 국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굳건한 안보태세와 대북 대화체널 기동을 위한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야당도 긴장국면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국민과 국가 안위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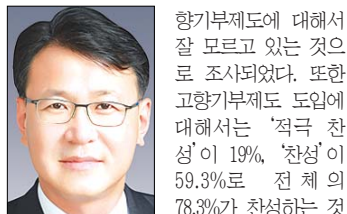
“‘고향기부제’ 도입 찬성 78.3%... 모름 67.4%”

양성빈 도의원 여론조사 결과 특산품 답례품 제공시 47.9% 기부횟수 늘릴 수 있어

전라북도의회 양성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장수군)이 고향기부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입 찬성여론이 7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기부제는 자신이 지정한 고향에 일정한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의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고향기부제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속해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분권정책의 일환으로 가정 ‘고향사랑 기부제법’의 입안을 준비 중에 있다.

여론조사 결과, 고향기부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잘 알고 있음’이 10%, ‘알고 있음’이 22.6%, ‘모름’이 67.4%로 대체로 고



양성빈 의원

향기부제도에 대해서는 ‘모름’이 67.4%로 조사됐다. 또한 고향기부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이 19%, ‘찬성’이 59.3%로 전체의 78.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에 얼마를 기부하겠느냐는 질문에는 ‘6만원에서 10만원 이하’가 33.8%로 가장 많았으며, ‘11만원에서 50만원 이하’가 17.2%, ‘51만원 이상’이 11%로 조사됐다.

그밖에 기부대상 지역에서는 ‘태어나고 자란 곳’에 기부하겠다는 의견이 55%로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했으며, ‘헛 거저지’에 기부하겠다는 의견이 26.6%로 다음을 차지했다.

또한 기부자에게 고향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의 65.8%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답례품 제공시 기부 횟수를 늘릴 의향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47.9%가 있다고 답변한 반면 30.2%는 없다고 답했다.

양성빈 의원은 “고향기부제를 시행하면서 고향의 농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경우 기부문화 확산은 물론 직거래 유통을 통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주승용 “안 출마 반대, 흡집 우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당 대표 선거 출마 반대 서명에 이름을 올렸던 이유를 밝혔다.

주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그가 국민의당의 자산이고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분명히 언젠가 국민들과 당원들이 안 전 대표를 필요로 해 찾을 날이 오기 때문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당 대표 출마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었다”며 “그래도 제가 안 전 대표보다 정치를 오래 해왔고 무엇보다 안 전 대표에게 애정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안 후보 출마 반대로 인해 불거졌던 국민의당 내홍·분열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뉴시스

‘박찬주 방지법’ 발의 붓물... 군서열 3위 이상 징계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 사태 이후 장성급 군인도 징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박찬주 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경우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11일 고위 장성급 장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4성 장군의 징계를 하려면 해당 징계자를 제외하고 징계자의 선임이 3명으로 이뤄진 징계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갑질 사건에 연루된 4성 장군인 사령관의 경우 군 서열상 3위에 해당돼 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는 징계위원 수의 부족으로 징계위 구성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징계처분 등의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미달돼 징계위 또는 항고심사위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국방부 장관이 민간위원 등을 위촉해 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처분 심의대상자의 계급이 장성급으로 3인 이상의 선임자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군내 서열 1, 2위인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 역시 징계가 가능해진다. /뉴시스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14살 소녀들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한 학교는 행복을 교육합니다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영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인연은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시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